

최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동향과 전망

- 나진·선봉경제특구를 중심으로 -

임음출 / 한겨레신문 북한전문기자

국 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① 개인 소유 부문의 확대, ② 경제 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실시, ③ 원가·가격·수익성 개념의 도입, ④ 무역 확대, ⑤ 경제특구에서의 외자 도입 명문화 등 시장 경제 요소를 전례없이 크게 가미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은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집중 분석한 이후 “북한이 불가피하게 개방과 시장 경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연 북한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의 북한 사회는 분명히 경제 분야에 관한 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는 ‘거북이 걸음’을 연상시킬 정도로 더디며, 그 과정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제외적 통제도 강화하고 있어 북한의 급속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역개방 조치 내놓아

북한은 최근 대외 개방에 제동을 거는 조

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개방을 거스르는 징후는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경제특구로 지정해 사회주의체제 속의 ‘국제자본주의 시험장’으로 여겨졌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그나마 개방에 따른 외자 유입으로 주민들이 하루 세 끼 쌀밥을 먹을 수 있어 지대 바깥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왔다. 나진·선봉 시내에는 활기가 넘쳤으며 식량 사정이나 의복, 전기 사정 등이 다른 지역보다 나았다.

그러나 최근 몇개월 사이 이 지역은 급격히 활력이 빠져 외국 기업인들의 발걸음이 갈수록 뜸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등을 돌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북한 중앙 당국이 직접 나서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한때 북한 당국의 손길을 벗어나 자유로운 상품과 외환 거래가 허용돼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던 원정리 국제자유시장에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원리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나진·선봉시 행정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한 상인은 누구를 막론하

고 물건을 함부로 내다 팔 수가 없게 됐다.

이전에는 일반 주민이나 외국 상인들도 북한 중앙 당국에 일정 비율의 '영업세(장세)' 만 내면 물건을 자유롭게 내다 파는 것이 가능했다. 지난 1997년 6월에 처음 문을 연 원정리 국제자유시장은 하루 출입 상인이 많게는 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누려왔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확산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곳이기도 한 국제자유시장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국제 상인들과 활기차게 물건값을 흥정하는 북한 상인들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기존 관념을 무색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턱없이 까다로워져 상인들의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국제자유시장의 위상

또 나진·선봉지대안 곳곳에 들어섰던 서방 유명 기업의 일부 옥외 광고 입간판도 최근 자취를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 입간판들이 김일성 주석의 동상보다 높게 치솟아 있어 수령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명령은 지난해말 나진·선봉지대를 방문했던 김정일 당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 위원장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코니카필름 등 국내외 기업들은 지난 19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

지대 광고 규정'에 따라 광고판, 광고탑, 전기 광고물, 전자 광고판 따위의 옥외 광고를 나진·선봉 행정 당국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현지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 왔었다.

사실 북한은 광고 규정을 공표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기업들의 무분별한 상업 광고가 자칫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놓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규정 안에 엄격한 광고 설치 규정을 마련해 놓았었다. 즉, ① 퇴폐적인 광고, ② 주민들의 사상 감정과 생활 기풍에 맞지 않는 광고, ③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광고, ④ 남의 기업이나 상품을 헐뜯는 광고 등은 사전에 설치를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서방 기업의 옥외 광고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것도 어쩌면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이는 사전 규제 조항이지 사후 규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쨌든 북한 당국의 일부 상업 광고 철거 지시는 몇 안되는 외국 기업의 상당한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료의 대외 경제 부서 대거 진출

외자 유치 업무를 떠맡은 각종 조직이나 인사 변화도 흥미롭다. 최근에는 경제·무역 전문 테크노크라트보다는 당성이 강한 군 관련 인물들이 대거 경제 관련 부서의 주요 자리를 메우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졌으며 군인들

이 경제 재건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군인은 김정일 총비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 소속원이 대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들은 전문 경제 관료와 달리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경직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군인 관료라는 점에서, 개방 의지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집안 단속에 더 역점을 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공장·기업소의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55세 이상으로 이뤄져왔던 기존의 간부층을 35~45세 가량의 젊은 계층으로 대거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젊은층 간부들의 상당수는 군 관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의 배치로 공장·기업소의 업무 효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돌격만 외치고 있어 숨쉴 틈이 없다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사고 있는 것으로 북한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외자 유치 관련 조직과 인원의 물갈이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남쪽 기업과의 협업을 떠맡아왔던 전문 경제·무역 관료들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지난 1990년초 북한이 소폭이나마 개방 정책 시동을 건 이후 남한 기업인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던 전문 경제 관료들이 현직에

남아있는 경우는 이제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알려졌다. 한때 북한 대외 개방의 핵심 실무 라인이었던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김응렬·임태덕 부위원장과 김문성 국제무역촉진위원장 등은 더러는 외화 불법 소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에 처해졌으며, 일부는 '경고'를 받고 근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남쪽 기업인들과 접촉이 잦았던 국·과장급 관리들도 최근 대부분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남쪽 기업인과 접촉을 하거나 사업을 벌여왔던 북쪽 인사들 치고 몸 성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셈이다. 용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들은 다시 남쪽 기업과의 접촉이나 사업 협의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도 기존에는 10 명이었으나 3 명으로 줄었다.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으나, 나진·선봉지대에의 외자 유치를 떠맡는 조직이 예상대로라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칠 뿐이다. 심지어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경제무역지대'로의 명칭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 나진·선봉지대 위상 재검토 작업

남북 경협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북한쪽 파트너의 말을 빌려 나진·선봉지역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인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나진·선봉경제특구의 위상에 대해 심각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나진·선봉지대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 남한 종교인들이 포교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업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통제 움직임은 지난해 10월경부터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북한 당국은 재미교포인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을 '간첩 활동' 혐의로 한참 동안 억류하다 풀어준 뒤,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어왔다. 예전 같았으면 북한 당국은 투자를 희망하는 남쪽 기업인에 대해 나진·선봉지대에 직접 초대해 극진한 대접까지 베풀면서 투자 상담에 응했으나, 김진경 목사 억류 사건 이후에는 가능한 중국 베이징으로 상담 장소를 바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으로 비자 얻기가 가장 쉬었던

나진·선봉지대가 이제는 들어가기 까다로운 장소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적지 않은 남한 기업인들이 투자 문제 따위를 협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거듭 제안을 넣어보지만 북쪽 관계자는 통명스럽게 “기다려달라”는 한마디만 남길 뿐 더 이상의 반응이 없다. 굳이 캐물으면 “남쪽 기업 유치와 관련된 중앙 당국 차원의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데다, 대남 경협 관련 조직 개편이 아직도 덜 끝난 탓으로 알고 있다”고 밝힐 뿐이다. 합작농장 운영 및 농산물 계약 재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두레마을영농조합 등 이미 현지에 진출해있는 단체나 기업들도 신규 사업 계약을 맺어야 하나 기존 파트너들이 대부분 자리를 옮긴 상태인 데다 후속 반응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기업인들은 북한 중앙 당국이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 개방 속도 조절 속에 시장 경제 학습 열기

북한이 나진·선봉경제특구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비교적 통제가 느슨했던 나진·선봉지대에 불어닥친 자본주의 바람이 '위험 수준'을 넘어버려 개방의 속도 조절 차원에서 중앙 당국의 직접 관여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은

사실 올해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원산과 남포를 보세가공구역으로 선포하고, 나진·선봉특구에서 가까운 칠보산 등을 관광특구로 개방할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발표 시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회사법」, 「보세가공구역법」, 「금융법」 등도 초안이 마련되고 내부 심의도 거의 끝나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게 북한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국내 몇몇 대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칠보산이나 백두산 등지의 관광 개발과 관련한 의향서를 주고 받거나 초기 단계의 협의는 마친 상태다.

또한 북한은 한편으로 개방의 물꼬를 막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시장경제체제에 정통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유독 중단없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진·선봉지대의 경우 북한은 지난해 9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나진기업학교(Rajin Business Institute, 교장 김광연)와 나진기업정보센터(Rajin Business Information Center)를 동시에 열었다. 나진대학(총장 정영택) 부설 연구소인 나진기업학교는 나진·선봉지대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과의 업무를 담당할 관리 및 운영 분야의 경제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이며, 나진대학 도서관 안에 세워진 나진기업정보센터는 나진·선봉지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축적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 나진대학은 해양운송학부, 금융학부, 경제경영학부 등 5개 학부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 당국은 유엔

산하 기구 및 다수의 재외 동포의 도움으로 지난 2년 동안 약 160만 달러를 들여 1,500권의 책과 컴퓨터 기기 등을 구입했다.

북한은 또 국제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강사진을 초빙했고, 20여 명의 학생들을 이들 나라에 보내 5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했다. 현재 나진대학에는 1,500여 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한 조만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홍콩에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에 100여 명의 경제 실무자들을 파견해,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 거래 방법 등을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실무자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진입하는 절차나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융자를 받는 방법 등도 연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진기업학교는 학생들에게 일반 투자 이론과 금융, 회계, 은행 업무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서비스 및 관광 산업 등을 가르치며, 특히 컴퓨터공학과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어를 영어를 포함해 중국어·일본어 교육 과정이 개설돼 있다. 기업학교의 교육 기간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에 따라 6개월, 5년, 5년 6개월 등으로 나뉜다. 장기 과정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단기 교육 과정은 나진·선봉지대 내 레스토랑이나 상점·호텔에서 일할 수 있

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겉으로는 개혁·개방을 경계하는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속으로는 개방을 대비하고, 개방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 완화 조치 등을 겨냥한 역개방 조치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이 최근 취하고 있는 역개방 조치는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대외 개방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개방 확대 조치를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단속용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의 최근 조치들은 미국의 금창리 지하 시설 사찰 압력과는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공세적인 지하 시설 공개 요구에 대해 사활을 걸고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여차하면 한판 붙겠다”는 업포를 놓고 있는 마당에, 다른 한편에서 유화적인 대외 개방 제스처를 보일 경우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을 북한 지도부가 내릴 법하다. 특히,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통제 강화 움직임은 ‘결사 항전의 정신’을 미국 정부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금창리 지하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서는 대

외 개방 제스처를 아무리 써봤자 외자 유치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가입해 경제 개발 자금을 용자받기 위한 시도를 벌여왔으나,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실효가 없다는 입장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북한 당국의 대남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점도 나진·선봉지대 투자 사업에 대한 북한 경협 종사자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위축시켰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소규모의 단발성에 그친 남북 경협의 지지부진함은 이 사업에 매달린 북한의 대남 경협 종사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무력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책임자는 북한 지도부로부터 문책과 노여움을 샀을 수도 있다. 실제로 남북 경협 참여 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북한에 대한 자금력과 정보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지난 10여 년에 걸쳐 대북 진출 사업에 참여한 업체 수는 500여 개에 달했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업체는 30여 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북한의 관심 위축은 남한 기업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를 돌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펴는 등 온갖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도로와 항만·호텔 건설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외자 유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견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오히려 자본주의 병폐만 위험 수준에 이르게 했다는 내부 비판이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을 더욱 옥죄게 했을지도 모른다. 최근까지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이나 개발 실상을 보면, 역개발 조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곤혹한 심정을 보다 절실히 읽게 해준다. 투자 실적이 당초 기대를 훨씬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음에 따라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대외 시장 개방의 효과를 의심케 한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 당국의 나진·선봉경제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까지 7억 5,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111개 사업의 외국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77개 사업에 5,792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재일 조총련이 1998년 9월에 작성한 「라진·선봉지대 외국 기업 투자 현황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UNDP) 300만 달러·개인 투자 150만 달러 등을 합치더라도 실제 투자액은 6,242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나진·선봉지대에 설립이 허용된 기업체는 121개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 회사는 86개이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42개에 불과하다고 이 보고서는 적고 있다.

그러나 이들 투자 업체마저도 크게 순조로운 사업은 벌이지 못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 부문에서 홍콩 타이슨社의 투자로 나진·선봉지대의 주요 간선도로 4차선이 완료되었으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원정리-나진간의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는 홍콩 타이슨社의 투자 중지로 북한 단독으로 진행되어 현재 약 50%의 공정만이 마무리되었다. 태국 록슬리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나진·선봉지대내 휴대폰 개통 준비 사업은 현재 중단 상태에 있으며, 록슬리社는 현재 7,325만 평방미터 규모의 통신센터를 세우기 위해 국제 입찰을 준비 중에 있다. 외국인 기업들이 전화를 가설 받기 위해서는 1,000달러의 예치금을 내야할 정도로 아직 통신 시설이 미비하다. 호텔 부문을 보면 홍콩 엠페러그룹이 투자한 호텔 공사가 4층까지는 마무리되었으나, 공사 하청 업체간의 공사비 체불 문제로 공사 진척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나진호텔은 106개의 객실 공사가 완료되었고 한식당·가라오케·상점·커피숍

검 바(BAR)를 운영하고 있으나 투숙객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화폐 유통 부문에 있어서도 나진·선봉지대에 처음으로 진출한 외국계 은행인 홍콩의 페레그린은행은 거의 철수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ING은행도 평양에서는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나진·선봉지대 안에 지점을 세우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

또한 당초 지난 1997년 12월에 화폐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발행키로 했던 1만원짜리 고액권 지폐도 1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나진·선봉지대에 진출하고 있는 그나마 몇 안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마저도 북한 당국이 보여주고 있는 개혁·개방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부족에 크게 실망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개방·통제 이중적 경제 정책 불가피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 가격의 자유화, 사유재산제의 도입, 각종 근로 인센티브제도 실시 등 자유경제시스템의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실제 나진·선봉지대에서 외환과 상품 거래 분야 등에서 시장 경제적 경쟁 요소를 대폭 수용하는 자본주의 대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개방에 따른 위력과 달콤한 과실을 직접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나진·선봉 개방에 따른 외자 유치 실

적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지대 안과 바깥 지역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위화감을 조성한 데다, 자유화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 해이, 해외 동포들과 남쪽 종교인들에 의한 무분별한(적어도 북한 당국이 보기에) 종교의 전파 등은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사회주의통제경제체제의 상대적 우월성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위기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그간 보여온 정책의 이중성이나, 철저한 경제적 실리 우선주의 세계에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자본주의 정글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불기 전까지는 개방과 통제의 양 고삐를 번갈아 죄었다 푸는 철저한 이중적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